

## 2단계 금융시장 안정 대책

천 일 영

- (내용) 10월 4일 발표된 「2단계 금융시장 안정대책」의 주요 내용은 회사채수익률 등 장기금리를 현수준에서 1%포인트 이상 하락시키며, 수익증권의 환매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, 대우 구조조정을 앞당겨 실시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것임
  - 이 세 정책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하락 유도임. 금리가 떨어져야만 주식시장도 살아날 수 있고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임
  - (회사채 금리 8%대 이하 안정 대책) 채권기금 20조 원을 10월 15일까지 조성, 채권기금 필요시 규모 확대, 채권기금 투신사 매각 채권 무제한 매입, 한국은행의 은행·투신 보유 국공채 직접 매입, 투신사 그레이본드(정크본드) 펀드 설정 등
  - (수익증권 환매 억제책) 대우 무보증채권 기간별 50~95% 보장(필요시 공적자금 투입), 기존펀드 채권시가 평가제 제외, 투신사 구조조정 내년 7월 이후 실시(경영 정상화에 중점)
  - (대우 워크아웃 조기 추진 대책) 대우중공업, 대우전자, 대우통신, 오리온전기, 대우전자부품, 쌍용자동차, 경남기업 등 7개사에 대해 10월말까지 워크아웃 계획 확정, 그리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해 11월 6일까지 워크아웃 계획 확정
- (효과)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.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면 금리 하락도 수익증권 환매 억제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임
  - 이번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정부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지급을 보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
  - 그러나 정부가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아예 대우채권을 따로 떼어내 배드펀드를 만들어 대우채권 관련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해야만 환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([iycheon@hri.co.kr](mailto:iycheon@hri.co.kr) ☎ 724-4013)

## 최근 주요 정책(1999. 10. 4 ~ 10. 10)

정리해고도 쟁의 대상이라고 판시	춘천지법 (10.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도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고 판시</li> <li>- 더불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 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판시</li> </ul>
99년 경제성장률 8.8%로 전망	한국은행 (10.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반기에도 빠른 경기상승세가 지속되어 당초 전망치인 6.8%보다 2.0%p 높은 8.8%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</li> <li>·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10.1%에 달할 것으로 예상</li> <li>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9년의 경우 0.8%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3.8%에 달할 것으로 전망</li> </ul>
주택공급 확대방안 확정·발표	건설교통부 (10.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 내용</li> <li>·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폐지</li> <li>· 내년 1월부터 모든 시중은행에 청약예·부금통장 개설 허용</li> <li>· 민영주택 청약자격 만 20세 이상 1인당 1주택으로 완화</li> </ul>
특소세 폐지 다음 달 시행	재정경제부 (10.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소세 폐지 발표로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법안의 국회통과 시점(11월 중순으로 예상)으로 앞당기기로 함</li> <li>- 특소세 폐지 대상: 가전제품, 화장품, 콜라·사이다, 피아노, 대중 스포츠 용품, 스키장·퍼블릭 골프장 이용료</li> </ul>
서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안 마련	서울시 (10.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의회 의견청취와 건교부 승인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</li> <li>- 주요 내용</li> <li>· 도심재개발 구역 내 21층 이상 혹은 높이 90m 초과 건물 건설 금지</li> <li>· 용도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, 30% 이상만 지정 용도를 맞추어 설계하면 건축 허가</li> </ul>
노사정위 3개 특위 및 2개 소위 구성 완료	노사정 위원회 (10.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위, 금융부문 특위, 부당노동행위 특위 등 3개 특위와 노사관계 소위, 경제사회 소위 등 2개 소위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</li> <li>- 12일 노사관계 소위, 13일 경제사회 소위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의 본격 활동이 시작될 방침</li> </ul>

## 주요 정책 정보(1999. 10. 11 ~ 10. 17)

10. 13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금융감독위원회) 위험 조기경보제도 도입 발표</li> <li>· 위험 조기경보제도는 부실징후 및 요주의 관찰 대상 여신을 미리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</li> </ul>
10. 13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중소기업청) 벤처넷을 통한 실리콘밸리 최신 동향 제공 개시</li> <li>·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벤처투자 및 종합지원 정보망인 벤처넷에서 실리콘밸리의 최신 동향도 제공</li> </ul>
10. 13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산업자원부) 업종별 전자상거래(CALS/EC) 시범사업 구축 개시</li> <li>· 연말까지 추진될 15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시작</li> </ul>